

UR협상 타결과 전자산업

주 : 본고는 지난해 말 협상타결된 UR과 관련 전자산업에의 영향과 파급효과를 수출과 수입 측면에서 분석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경제 및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대우경제연구소, 1993. 12. 16)에서 전자산업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한국전자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92년말 현재)

(단위 : 건)

	반덤핑			특허권침해			긴급수입제한			잔존수입제한		
	규제	조사종	기타	규제	조사종	기타	규제	조사종	기타	규제	조사종	기타
미 국	3	1	-	1	1	6	-	-	1	-	-	-
EC/각국	6	4	1	-	-	-	-	-	2	2	-	1
호 주	-	1	4	-	-	-	-	-	1	-	-	-
캐 나 다	-	-	2	-	-	-	-	-	-	-	-	-
합 계	9	6	7	1	1	6	0	0	4	2	0	1

주 : 기타는 기각, 화해, 무죄해, 종결 등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선진국의 수입규제 현황'93. 4에 의거 작성

주요국의 전자제품 수입관세율 현황

(단위 : %)

국 명	수 입 관 세 율	
선진국	미 국	0~15% 대체로 5% 이하
	E C	0~15% 대체로 5% 내외, 일부 고관세품목 14%
	일 본	0~7.2%
	캐 나 다	9.3%
NICS	싱 가 폴	대부분 무관세(에어콘은 유일 수입허가 품목)
	홍콩	0%
ASEAN	인도네시아	평균 26.1%
	태국	평균 35.5% 수준
	말레이시아	평균 50% 수준
중남미	칠레	11% 수준
	브라질	30% 수준
	멕시코	10~20% 수준
	아르헨티나	20% 수준

자료 : 각국의 관세율표 등에 의거 작성

1. 전자산업의 수출입에의 영향

가. 수출에의 영향분석

UR협정 내용중 관세인하 또는 무세화 및 반덤핑 등의 남용억제 등에 의해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는 수출확대에 큰 제약요인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1) 대 선진국 수출시장

시장별로 보면, 선진국시장뿐 아니라 개도국시장으로의 수출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에의 수출은 원산지규정의 명료화,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의 남용억제와 기술장벽의 완화 및 정부조달시장에의 신규 참여로 수출환경이 호전되어 다

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덤핑, 특허침해제소, 긴급수입제한 및 잔존수입제한 등의 수입규제 또는 조사중인 전자제품의 수출액은 34억달러('92년 기준)로 전체수출의 16.6%를 차

지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반덤핑 조치건수가 9건이고, 조사대상건수는 6건으로 총 15건 등이다.

(2) 대 개도국 수출시장

개도국에의 수출은 수입제한조

치의 해제, 관세인하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개도국의 관세수준은 30~50% 수준(태국의 경우 36%, 말레이시아는 50수준임)으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3) 수출 환경

그러나,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로 인해 기술도입의 어려움과 로얄티 인상 및 침해시 제재 강화 등은 향후 전자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에 큰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첨단기술제품에 대해 10~15%의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어 현재에도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는데, 향후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더욱 강화되면 국제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련되는 품목들은 반도체, 컴퓨터 H/W 및 S/W, 휴대용 전화기 및 교환기 등의 첨단통신제품, HDTV, LDP 등의 첨단가전제품 등을 들 수 있다.

나. 수입에의 영향분석

UR협정 내용중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점진적인 철폐, 유통시장의 개방, 무관세화 참여, 정부조달시장 개방 및 기술장벽의 철폐 등이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중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점진적인 철폐, 무관세화에의 참여와 정부조달 시장개방으로 국내시장 잠식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으로 교환기, 데이터장비 및 통신기기

UR타결이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구 분	수 출 측 면	수 입 측 면
기 회 측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EAN, 중남미 등 개도국의 고관세 인하 원산지 규정의 명료성, 예측성제고 및 국제통일규범 제정 추진 개도국의 무역관련 투자조치(국산부품사용의무, 수출시장지정 등)의 제거 기술장벽제거(정보의 조기입수 및 기술규격 획득용이) 정부조달시장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및 발전에 따른 컴퓨터기기 수요 증가
위 험 측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에 따른 첨단 기술습득 곤란 및 로얄티 상승, 위조상품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수입품의 판매력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에 따른 국내업체의 부담 증가 무역관련투자조치제거에 따른 국산화 개발과 수입허가의 연계, 국산화개발 품의 우선구매관행 등의 시정 무세화실현시 수입확대 효과 정부의 조달시장 개방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시 일본산 유입

UR타결시 전자산업 수입환경 변화와 영향

구 분	예상되는 환경변화	수입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무역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유통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제품 수요기반 확대 외국산 전자제품의 시장잠식
지 적 제 산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UR타결후 실질적 보호수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산 컴퓨터 S/W의 시장 장악 컴퓨터 H/W업계는 단기적으로 수요 위축 가능성 지재권보유 외국업체에 대한 직접투자 촉진 예상
무 역 관 련 투 자 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제한 점진적 완화 국산화개발품의 우선구매정책 및 관행의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부품업계에 외국계위 진출 확대 국산화 또는 수입대체개발 지연
관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품목의 무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세화품목의 수입확대
원 산 지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의 명료성, 예측가능성, 국가간 통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의 대한 진출환경 개선효과는 미미
반 덤 평 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덤핑조치의 객관성, 명료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의 대한 진출환경 개선효과는 미미
정 부 조 달 협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가입국으로서 조달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와 한전의 구매물량의 잠식 예상
기 술 장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제도 및 5개 특별법에 의한 수입장벽적 요소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업체의 대한 진출여건 개선 예상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선다변화제도의 점진적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관련대상 품목은 약 50여개로 해제시 상당한 수입증가 예상

주)수요기반확대에 따른 국내 업체의 내수판매 확대효과

내수수요 대비 수입제품의 점유율('92년)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국내판매	수입액	합계	수입제품점유율
가전	4,248	777	5,025	15.5
칼라TV	662	7	669	1.0
VTR	444	28	472	5.9
오디오전체	801	444	1,245	35.7
냉장고	900	27	927	2.9
전자렌지	127	0.2	127	-
세탁기	569	9	578	1.6
조명기구	130	91	221	41.2
산전	2,966	3,205	6,173	52.0
유선전화기	93	5	98	5.0
교환기	505	31	536	5.8
무선전화기	109	76	185	41.1
컴퓨터본체	586	415	1,001	41.5
주변기기	391	1,069	1,460	73.2
계측기기	14	278	292	95.2
부품	5,022	7,668	12,690	60.4
IC	784	4,050	4,834	83.8
전자관(CPT등)	981	722	1,703	42.4
축전기	372	177	549	32.2
커넥터	164	140	304	46.1
PCB	314	90	404	22.3
저항기	110	119	232	51.3
자기테이프	226	84	310	27.1
전자전체	12,236	11,650	23,886	48.8

주 : 수입제품 점유율 = 수입액 / (국내판매 + 수입액)

자료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92 전자전기공업통계, '93. 4 등에 의거 작성

분야의 국내시장 잠식이 예상되며 부품에서도 국내 부품사용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없어진다면, 자금력이 약한 국내 부품기업은 경쟁력 상실로 인한 도산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부품의 수입확대 및 대일종속 현상은 현재보다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입선다변화 해제로 인해 가전분야에서 일본가전업체들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엔화강세로 일본제품에

대해 다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철폐된다면 국내가전시장(대형 C-TV, 퍼스컴, 대형CPT, 카폰 및 휴대폰 등)의 상당부분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입시장에서 주요 국가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가정용은 일본이 61.0%로 미국의 10.6%와 EC의 9.4%에 비해 월등히 높고 산업용에서는 일본은 32.4%, 미국은 40.6%, EC가 9.0%이며 부품에서 일본은 39.7%, 미국은 25.7%, EC가 4.8% 등이다.

다. 종합평가

UR은 우리나라 전자산업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R타결시 협정내용 중 관세인하, 원산지규정, 무역관련투자조치, 반덤핑, 기술장벽 등은 외국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보다는 국내업체들의 수출확대 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며, 산업별로 보면, 이미 수입개방이 진전되어 있는 산전 및 부품분야는 수출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가전분야에서는 일본 및 일본계 ASEAN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대응방안

UR타결후 고관세인하 및 각종 수입제한조치의 철폐가 예상되는 동남아 및 중남미 개도국들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이 요망된다.

더욱이 개도국 전자시장의 경우, 국내업체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가전, 컴퓨터 및 통신기기의 수요가 성장단계에 있어 향후 적극적인 시장개척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서비스시장 개방을 활용하여 지금까지의 OEM수출에서 벗어나 해외유통부문의 참여를 강화하고 자사브랜드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하며, 선진국은 물론 향후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개도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을 향상시켜 새로운 시장기회를 조기포착,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상정

UR타결시 전자산업 수출환경 변화와 영향

구분	예상되는 환경변화	수출에 미치는 영향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의 경우 관세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전자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ASEAN을 비롯한 중남미 등의 관세율이 높아 인하폭도 클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대개도국 수출확대 효과 기대 ○ 일본산과의 가격격차가 다소 축소될 수 있으나, ASEAN과 중남미 등 개도국 현지생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 개선으로 수출확대효과 기대 ○ 일부 무세화가 실현되면 경쟁우위에 있는 일부 가전품, 컴퓨터주변기기, 반도체 등의 수출확대 기대
지적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변경기대(통일화) ○ 국별보호제도 통일 및 내외국인 무차별 운용에 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업체의 외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여건은 개선되나, 전체적으로 불리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국가는 절대적 기술우위에 있는 일본, 미국, EC 등 선진국임 ○ 기술유출억제, 로열티인상, 지적권 제재 강화 등으로 자국제품의 경쟁력 강화 도모
원산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수입장벽으로 가장 많이 활용해온 EC 및 미국에의 수출 및 현지진출 여건이 다소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 미국의 원산지규정 운용의 주요대상이었던 일본이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 ○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국제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이 이루어지면 사전대응가능으로 수출여건 호전
무역관련 투자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의 경우 이미 대부분 철폐 ○ 전자산업은 수입대체, 수출전략 산업화 하고자 다양한 투자장벽 조치를 취하고 있는 ASEAN, 중남미 개도국의 투자 및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대외투자 및 수출환경 개선 ○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부품현지 조달 체계를 갖추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을 듯함
반덤핑상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반덤핑 조치를 수입규제수단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해온 EC, 미국, 호주 등의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대선진국(미·EC·호주 등) 수출환경 개선 ○ 또한 일본 및 수출 개도국인 대만, 홍콩, 중국, 아세안 등도 혜택을 받을 것임
세이프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최근들어 거의 사용되지 않아 영향은 별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임
기술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기술장벽을 많이 활용해온 선진국에의 진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저위에 있는 한국의 수출확대 효과 기대 ○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많은 혜택 예상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가입 12개국 정부조달시장에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경우, 통신기기 및 컴퓨터 수출 가능(단말기, 주변기기 중심) ○ 그러나, 정부조달시장이 단위계약규모가 크고 국가간 통상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선진국 상호간 점유율 확대 예상→한국의 선진국 조달시장 참여는 제한적

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입에서는 일본업체의 국내진출에 대응하여 가전부문에 서 국내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국산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반덤핑 또는 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